

비무장지대 생태조사의 의의와 전망

文晚龍*

- | | |
|--------------------------|-------------------------|
| I. 머리말 | V. DMZ 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안 |
| II. DMZ, 역설과 모순의 공간 | 들: 농담에서 세계유산까지 |
| III. DMZ의 재발견: 첫 번째 생태조사 | VI. DMZ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선 |
| IV. 반세기 동안 반복된 공동생태조사 제안 | VII. 맺음말 |

• 국문초록

냉전의 유산 DMZ는 1960년대 중반 첫 생태조사가 추진되면서 야생동식물의 보고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남한 생물학자들은 남북 공동으로 DMZ 생태조사 실시를 제안했으며, 이후 DMZ를 보존하거나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구상들이 제시되었다. 그 과정에서 DMZ 생태조사는 특별한 이벤트에서 일상적인 국토관리로 변모했다. 하지만 북한은 DMZ를 남북 분열의 상징이자 속히 없애야 될 유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남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DMZ가 갖는 다양한 가치를 북한에 인식시켜야 하고, 서해의 평화수역 문제를 함께 풀어갈 필요가 있다. 매설된 수많은 지뢰를 생각할 때 DMZ는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평화적 활용방안으로 여겨지며, 이를 위해서 동식물을 매개로 한 공동 사업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남북한 사이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DMZ를 생태·평화적 관점에서 주목받는 대상으로 만든 것은 그 곳에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비무장지대(DMZ), 생태조사, 야생동식물의 보고, 평화적 활용, 생태환경 보전

*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연구소 조교수

I. 머리말

한반도 중앙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한국전쟁의 결과물이자 냉전의 상징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에는 철책선이 없고 단순히 1,292개의 말뚝 표지물이 있을 뿐이다. 대신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으로 각각 2km 떨어져 설치된 비무장지대의 남방과 북방의 끝에 철책선이 설치되어 있다. 철책선은 생태계의 단절을 의미하지만 인간의 접근이 제한되어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차단됨으로써 비무장지대는 독특한 생태계를 갖게 되었다. 그 덕분에 DMZ는 평화와 생명의 원천이자 남북한 사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진기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의 협력적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1990년대 초반 남북 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교환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면서 DMZ에 대한 정책적·학문적 관심은 크게 높아졌다. “비무장지대의 새로운 생태계는 동식물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학자에게는 귀중한 연구대상의 자연일 것이며, 사회과학자에게는 양대 이념이 맞섰던 비극의 역사 현장”¹⁾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비무장지대에 주목했다. 특히 2000년에 처음 열린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들이 DMZ 관련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그 결과 DMZ 관련 단체 수와 연구자 수로만 따지면 이미 ‘DMZ학’이라는 독자적 학문 영역이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이르렀다.²⁾ 최근에는 DMZ와 관련된 기존 연구 경향의 변화를 분석하는 메타연구도 등장했다.³⁾ 물론 한국 DMZ에 대한 관심은 국내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어서 해외에서도 상당한 수의 글들이 발표되었다.⁴⁾

-
- 1) 정재훈, 「발간사」, 『비무장지대인접지역 자연종합학술조사보고서』,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2, 1면. 정재훈은 문화부 문화재관리국장이었다.
 - 2) 김재한, 「DMZ 연구의 오해와 논제」, 『통일문제연구』 23-2, 평화문제연구소, 2011, 110면. Lisa Brady는 ‘DMZ-ology’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Lisa M. Brady, “Korea’s Green Ribbon of Hope: History, Ecology, and Activism in the DMZ”, *The Solutions Journal* 3-1, 2012, pp.94~98.
 - 3) 박은지·여인애, 「한반도 비무장지대 일원 정책과 연구의 변화 및 시사점」, 『환경정책』 26-2, 한국환경정책학회, 2018, 19~45면; 박선일·배선학,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한 DMZ 연구 동향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4-3, 한국지역지리학회, 2018, 406~417면.
 - 4) 예를 들어, Julia Adeney Thomas, “The Exquisite Corpses of Nature and History: The Case of the Korean DMZ”, *The Asia-Pacific Journal* 7-3, 2009, pp.1~17; Lisa M. Brady, “Life in the DMZ:

이 글은 기본적으로 정치·군사적 공간인 DMZ에 대한 인식 변화가 DMZ 생태조사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일 것이고, 이후에 계속된 생태조사와 비무장지대의 보전·활용을 둘러싼 시도들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특별한 이벤트였던 DMZ 생태조사가 이제는 일상적인 국토관리로 자리잡아가는 과정과 그것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간 비무장지대를 남북한이 보전하고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⁵⁾, 대부분 문제를 함께 풀어갈 또 다른 행위자인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제안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DMZ 보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이견을 좁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비무장지대라는 독특한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서식하는 생물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매개물이자 촉진자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DMZ, 역설과 모순의 공간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후퇴하여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비무장지대의 관리와 감시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영유권은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다. 1991년 이후 군사정전위원회가 사실상 역할을 못하고 있고, 2013년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까지 정전협정은 유효한 상태이며 일부 지역에서 그 폭이 줄어들었지만 비무장지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⁶⁾

Turning a Diplomatic Failure into an Environmental Success”, *Diplomatic History* 32-4, 2008, pp.585~611 등을 들 수 있다.

5)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만들든, 국제평화 기구를 유지하든,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제시된 방안들이 대표적인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방안들이다. 「文대통령 “북미대화 완전타결 반드시 성사시키겠다.”(종합)」, 『연합뉴스』 2019.3.1.

6) DMZ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는, 코리아DMZ협의회, 『DMZ 총람』, 늘품플러스, 2011 참고.

비무장지대의 전체 면적은 약 907.3km²로 한반도 전체 면적(약 22만km²)의 0.45% 정도이다. 비무장지대의 남북한계선에서 남쪽으로 5~20km 사이에는 민간인통제지역(CCZ: Civilian Control Zone)이 설정되어 있다. 1954년 미8군 사령관이 직권으로 歸農線을 설정했고, 휴전선 방어 임무가 한국군으로 전환되면서 1958년 민간인통제선으로 명칭이 바뀌고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다.⁷⁾ 東高西低의 형태를 보이는 한반도 지형과 기후적 특징에 따라 비무장지대도 태백산맥 동부의 동해안지역, 태백산맥 서쪽의 중동부 산악지역, 중서부내륙 평야지역, 서부해안·도서지역 또는 동부, 중동부, 중부, 서부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자연경관이나 생태계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과 달리 DMZ에는 남북의 무장한 군병력이 상시 주둔하는 전방 감시초소(GP: Guard Post)가 존재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이에 따라 非무장지대가 아니라 重무장지대라거나 秘무장지대라는 별칭을 받기도 했다. DMZ 내에 위치하고 있는 남측의 대성동, 북측의 기정동은 휴전협정에 의해 민간인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인정받았지만,⁸⁾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는 인간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편이다. 반달가슴곰, 여우, 사향노루, 산양, 수달 등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소이자 두루미 등 한반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오는 철새들의 생존터전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비무장지대는 ‘아시아 최대 자연보호지역’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76.6%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삼림이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량은 그리 높지 않다. 이는 시계확보를 위한 군사작전으로 인한 산불 등으로 숲이 우거지지 못하기 때문으로, 울창한 숲을 보기가 어렵다. 또한 이 지역은 뛰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명소뿐 아니라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한 편이다. 따라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공간이지만 향후 손꼽히는 관광지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7) 1997년 민통선의 범위가 남북한계선 20km에서 15km로 축소되었으며, 2007년 국회 국방위는 민간인 통제구역의 5~10km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북한과의 대립이 완화된 1990년대 이후 민통선의 범위와 제한조건 등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에 대한 개발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8) 행정구역상으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인 대성동은 국내 유일의 최북단 비무장지대 마을로서, 400m 밖에 군사분계선이 지나고 있다. 주민들은 국방과 납세의 의무가 없는 대신 외부인이 들어와 살지 못하며, 농업활동을 할 때 판문점 경비대대의 경호를 받는다.

도 하다.

긴장과 대결의 최전선으로 금단의 땅이자 불모의 땅이었지만 한편으로 희귀 야생 동식물의 천국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 DMZ이다. 또한 비무장지대는 단순한 생태계의 보고일 뿐 아니라 한국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弓裔都城을 비롯한 다양한 유적지를 품고 있는 역사·정치·군사·문화가 녹아 있는 복합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같은 다양한 성격은 냉전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비무장지대가 생명의 공간으로서, 평화를 이끌어내는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개선될수록 DMZ를 오가는 발길이 많아질 것이고, 이는 DMZ에 살고 있는 많은 동식물들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 DMZ의 산양이 지금처럼 평화롭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의 화해와 평화 대신 현재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어야만 하는 역설이 존재한다. 이처럼 DMZ는 역설과 모순이 가득한 공간이다.

Ⅲ. DMZ의 재발견: 첫 번째 생태조사

1953년 휴전과 함께 DMZ가 등장하고 10여년이 지날 때까지 비무장지대는 일촉즉발의 화약고였다. DMZ를 다룬 거의 대부분의 언론 기사는 남북간의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과 갈등으로 채워졌다. 극히 일부 기사가 “한국의 별천지 중립지대 대성동” 주민이나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군생활을 다루는 정도였고, 1961년 당시 교통부 장관이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비극적으로 조성된 비무장지대라든지 판문점 혹은 UN군묘지 등”을 관광사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간략히 언급한 정도가 전부였다.⁹⁾ 하지만 1964년 2월 동아일보에는 뉴욕타임즈와의 특약으로 “금수의 낙원 비무장지대”라는 새로운 관점의 기사가 실렸다.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에는 새와 맹수 등 야생동물이 마음 놓고 번식하여 제 세상을 만났다는 보도였다.¹⁰⁾ 그간 중무장한 병력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9) 1958년 12월 경향신문에 6회에 걸쳐 연재된 「한국의 별천지 중립지대 대성동의 25시」 기사와 「한국관광사업의 구상」, 『동아일보』 1961.2.11 등을 들 수 있다.

10) 오스카 가드바우트, 「금수의 낙원 …… 비무장지대」, 『동아일보』 1964.2.26. 이 기사는 그보다

현장이자 병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괴질(유행성출혈열)이 전파되던 위험한 장소였던 비무장지대의 가치가 새롭게 알려진 것이다.¹¹⁾ 이 보도가 DMZ에 대한 인식 변화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로 이듬해 DMZ에 대한 최초의 생태조사가 시작되는 배경의 하나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DMZ 생태조사는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의 대표와 미국 학술원의 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한국 학술원 및 한국학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동물학자 쿨리지(Harold Jefferson Coolidge Jr.)와 한국 생물학자들의 지속적 교류의 결과물이었다. 1965년 11월 서울대 교수 강영선은 쿨리지에게 서울대학교 명예박사학위를 주선했고,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DMZ 생태조사라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냈다.¹²⁾ 이 구상은 한국 생물학자들뿐 아니라 미국 학계에도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1963년 ‘한국의 자연 및 자연자원보존학술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연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한국학자들은 해외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할 수 있었고, 1964년부터 시작한 국제생물사업계획(IBP, International Biological Programme: 1964~1974)으로 ‘생태계 생태학’(ecosystem ecology) 연구가 확산되던 분위기에서 미국은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일주일 전에 실린 뉴욕타임즈 기사를 옮긴 것이다. Oscar Godbout, “Wood, Field and Stream: Wildlife in Korean Demilitarized Zone Is Unlikely to Be Disturbed”, *The New York Times*, 1964.2.20. Oscar A. Godbout, Jr.는 뉴욕타임즈의 아웃도어 칼럼리스트(outdoor columnist)로 활동했다.

- 11) 흔히 유행성출혈열로 알려져 있는 신증후군출혈열(HFRS: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은 한국전쟁 중 UN군에서 약 3,200명 이상의 원인 불명 급성 출혈열 환자가 발생하여 수백명이 사망하면서 한국 출혈열로도 불렸다.
- 12) Coolidge는 1965년 11월 4일 서울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뒤 행한 “인간의 자연환경을 수호함에 있어서 국제자연보존의 역할”이라는 연설의 서론에서 비무장지대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 동물학계의 태두로 꼽히는 강영선은 다양한 국제기구와 자신이 구축한 국제적 협력관계를 이용하여 세포하에서 시작한 연구 궤적을 인류유전학, 초파리유전학, 암세포 연구를 거쳐 어류유전학 등 세포유전학 전반까지 확장해갔다. Coolidge는 강영선의 협력 파트너 중 한명이었다. 신항숙·문만용, “강영선의 한국생물학 만들기”, 『제7회 한일과학사 세미나 발표집』, 한국과학사학회, 2017, 79~83면; Hyun, Jaehwan, “Making Postcolonial Connections: The Role of a Japanese Research Network in the Emergence of Human Genetics in South Korea, 1941~1968”, 『한국과학사학회지』 39-2, 한국과학사학회, 2017, 293~324면.

것이다.¹³⁾

쿨리지와 5명의 한국 학자들은 1965년 12월 3일간의 예비답사를 진행했고, 뒤이어 한국의 생물학자들은 DMZ 인접 서부지역인 판죽골에서 처음으로 생태조사를 수행했다. 이듬해 강영선은 이때 조사한 기본자료를 가지고 도미하여 4주 단기연수를 받고, DMZ 조사에 대해 미국 스미소니언연구소와 합의했다. 일단 2년의 기초연구를 진행하며, 비용 12만불은 미국이 부담하고 실제 조사는 한국 연구인력이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년간의 예비조사 이후 5년간의 본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¹⁴⁾

이 계약에 따라 1966년 6월 “비무장지대의 자연보존과 야생생물의 생태 조사 및 한국과학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미국 학자 18명이 한국을 찾았고, 이중 일부는 한국에 8개월간 체류하면서 한국의 조류, 야생동물, 식물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한국 생물학자 다수가 외국학자들과 공동으로 장기 연구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해 9월 일본에서 열린 태평양과학회의에서 한국대표로 참여한 강영선이 비무장지대를 국립공원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여 회의의 정식의제로 채택되었다.¹⁵⁾ 군사적 충돌의 현장이 아닌 생태연구의 대상으로 DMZ가 국제학계에 데뷔하게 된 것이다.

곧이어 비무장지대 횡단촬영이 진행되었고, 1966년 10월부터 현지조사가 시작되어 68년 8월까지 13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세 곳의 비무장지대가 존재했는데, 학술조사가치로는 한국이 가장 커서 이 연구결과는 세계 과학계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¹⁶⁾ 하지만 위험천만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조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어떠한 사고도 감수한다는 각서를 써야했다. 또한 한국전쟁 중에 북한에서 월남한 조류학자 원병오는 아버지(원홍구)가 있는 북으로 오라는 북한의 선전방송 때문에 항상 군요원이 옆에 붙는 감시를 받아야 했다.¹⁷⁾

13) 생태학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김준호, 『한국 생태학 100년』, 서울대출판부, 2004를 참고할 수 있다.

14) 하국 강영선박사 정년퇴임기념사업회 편, 『하국 강영선박사 정년퇴임기념문집』, 1982, 220~224면; Smithsonian Institution, *Smithsonian Year 1968*, 1968, p.288.

15) 「한국비무장지대 국립공원안 채택」, 『동아일보』 1966.9.1.

16) 한반도 외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공화국의 국경지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국경지대 등이 비무장지대였다. 「비무장지대 횡단촬영 마치고 현지답사」, 『동아일보』 1966.9.12.

스미소니언연구소의 생태학부 책임자 뷔크너(H. K. Buechner)는 1967년 11월 한국을 방문하여 생태조사를 위해 스미소니언이 280만불을 원조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문교부, 농림부, 과학기술처 등에 지원을 요청하여 총 소요경비의 10~20%를 보조받기로 했으며, DMZ뿐 아니라 한국 전역의 생물, 기상, 농업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 계획을 주관할 한국생태연구소를 세우고, 중고교 교사, 학생들의 집단교육 학술활동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스미소니언연구소와의 협력사업이 단순히 DMZ 지역의 생태조사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전역에 대한 생태조사와 교육까지 확장될 것임을 뜻했다. 이를 위해 뷔크너 등 스미소니언연구소 연구자들과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 교수였던 곤충학자 김계중이 컨설턴트로 참여했고, 한국연구자들로부터 5년간의 연구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통해 27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수립했다.¹⁸⁾

하지만 1968년 들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잦아지면서 DMZ 조사사업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1·21 사태,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유엔사 경비부대 트럭 피습 사건 등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그 결과 1968년 9월 예비조사 종료 후 스미소니언연구소는 연구원들의 안전 문제를 들어 5년간의 본조사를 취소했다. 그 배경에는 군사적 긴장과 함께 긴축재정(financial austerity)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2년간의 조사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는 1968년 9월 스미소니언연구소에 제출되었다.¹⁹⁾ 이 보고서의 속표지에는 “Ecological Study in Korea, Final Report”라는 제목 아래 Helmut K. Buechner, Edwin L. Tyson, Ke Chung Kim의 세 명이 참여자로 명시되어 있었다. 뷔크너는 서문에서 이 기획이 콜리지에 의해 촉발되었다면서, 콜리지가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전환시키는 가능성을 생각했다

17) 조류학자 원홍구는 북한을 대표하는 생물학자였으며, 아들인 원병오가 날려 보낸 북방쇠씨르레기를 북에서 확인함으로써 새를 통해 부자가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원홍구와 원병오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앤도 키미오 저, 정유진·이은옥 공역, 『아리랑의 파랑새: 조류학자 원홍구·원병오 부자 이야기』, 컵앤캡, 2017 참고.

18) 이병훈, 『유전자 전쟁의 현대사 산책』, 사이언스북스, 2015, 17면.

19) Helmut K. Buechner, Edwin L. Tyson and Ke Chung Kim, *Final Report: A Cooperative Program for Ecosystem Research in Korea, October 1966~September 1968*, Office of Ecology, Smithsonian Institution, 1968. 스미소니언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이 보고서의 사본을 막스플랑크연구소의 현재환 박사로부터 제공받았다.

고 밝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66년 DMZ 조사 초기부터 국립공원화라는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DMZ를 생태평화공원 등으로 만들어 보전하자는 구상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파트Ⅲ에는 DMZ 생태조사에 참여한 한국인 학자들의 주제별 보고서 15편이 실려 있다. DMZ에 대한 여러 문헌들이 DMZ에 대한 첫 발간물로 1968년 12월 『한국식물학회지』에 실린 이일구의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Pinus Densiflora* in DMZ area”를 꼽는다.²⁰⁾ DMZ 인근의 소나무 분포에 대한 이 논문은 3개월 먼저 스미소니언연구소에 제출한 보고서에 실린 “On the Ecology of *Pinus Densiflora*”와 동일한 글이었다. 사실 그보다 1년 이상 앞선 1967년 3월에 발표된 김봉균·박용안의 “편치볼의 생성원인”에 대한 논문이나 최기철·전상인이 1968년 3월에 발표한 영동지방에 서식하는 담수어에 대한 연구도 DMZ에 대한 연구 내용을 담고 있었다.²¹⁾ 또한 비록 한쪽 분량의 연구노트였지만 강영선·문광웅이 1968년 2월 미국 학술지에 DMZ 인근에 서식하는 초파리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²²⁾ 그밖에도 DMZ 인접지역에 대한 연구내용을 담고 있는 몇 편의 논문이 1967~1968년 국내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스미소니언연구소의 최종보고서에 실린 결과물이었다. 이는 이때의 DMZ 생태조사가 분야를 막론하고 DMZ에 대한 최초의 학술적 분석이었음을 말해준다.

흥미롭게도 스미소니언연구소의 최종보고서에는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한국인 연구자들이 수행한 개별 보고서에 대해 매우 신랄한 평가가 실려 있다. 컨설턴트로 참여한 김계중은 2년간의 예비사업이 다소 실망적이었으며, 그 원인은 한국 과학자들의 낮은 과학역량과 당시 학계 환경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²³⁾ 다시 말하면, 한국 학계가 그같은 사업을 추진할만한 준비가 아직

20) 예를 들어 김재한, 앞의 2011 논문, 108면.

21) Bong Kyun Kim and Yong Ahn Park, 「The Origin of the so-called Punch Bowl」, 『지질학회지』 3-1, 대한지질학회, 1967, 61~66면; 최기철·전상인, 「영동지방에 서식하는 담수어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동물학회지』 11-1, 한국동물학회, 1968, 13~21면.

22) Kang, Y. S. and K. W. Moon, “Drosophilid Fauna in the Vicinity of the Demilitarized Zone in Korea”, *Drosophila Information Service* 43, 1968, p.148.

23) Ke Chung Kim, “Part Two: The Smithsonian Ecology Program in Korea: Review and Recommendations”, Helmut K. Buechner, Edwin L. Tyson and Ke Chung Kim, *op. cit.*, pp.1~10.

되어 있지 않았다는 냉철한 평가였다. 사실 스미소니언연구소가 기대했던 것은 비무장지대의 생물상에 대한 단순 조사를 넘어 체계적인 생태학적 분석이었지만 당시 한국 생물학계의 생태학이나 생태계 연구에 대한 이해는 그리 높지 않았다. 또한 미국과 한국 연구진들 사이에 학문적 수준이나 관심 차이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존재했다.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위계적 분위기 등 연구서열 중심의 한국 문화는 미국의 공동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되는 국제공동연구프로그램이 겪는 흔한 문제였지만 DMZ 생태조사 사업을 추진할 때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변화하기 힘들었고, 결국 한국 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미국 학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비록 본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DMZ 생태조사는 골칫거리 DMZ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된 기회였다. 비무장지대가 생태의 보고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또한 한국 생물학자들은 세계적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비록 그들로부터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의 연구활동에 대한 가치를 한국 정부와 사회에 내보일 수 있었다. 국제생물사업계획 같은 다국적 프로젝트의 발족을 바라보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던 생물학자들은 때마침 스미소니언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DMZ 생태조사라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보임으로써 정부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²⁴⁾

IV. 반세기 동안 반복된 공동생태조사 제안

1971년 남과 북은 통일과 관련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는 7·4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러한 해빙 분위기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심도 되살렸다. 우선, 1968년 영문보고서로 스미소니언연구소에 보고된 DMZ 조사 결과가 1972년 6월 한글 보고서로 발표되었다. 1966년부터 2년간 진행된 기초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비무장지대

24) 국제생물사업계획 등 당시 생물학자들의 활동과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문만용·신향숙, 「한국 생물학자들의 생존기」(미발표원고)에서 다루고 있다.

의 천연자원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지만 식물상과 동물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DMZ 인접지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국내 첫 보고서였다.²⁵⁾ 이 책자는 스미소니언 보고서를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니고, 생태학적 분석 결과는 빼고 재정리해서 식물자원, 동물자원, 지질조사로 구분하여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동식물 목록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생태조사 대신 붙은 ‘천연자원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은 자신들의 연구가 지닌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생물학자들의 전략이었다. 같은 조사에 기반을 둔 두 보고서의 내용과 제목이 다른 것은 독자층이 다르다는 이유도 있지만, 한글 보고서의 논조가 비무장지대의 동식물상이 풍부하기 때문에 연구와 보전가치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잡혔기 때문이었다. 그 덕분에 휴전 이후 15년간의 생태환경 변화나 파괴된 식생의 복원 같은 문제는 뒤로 밀렸다.

이 보고서의 필자로 이름을 올린 강영선은 “남북한 통일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우선 휴전선 일대를 남북한 공동으로 평화이용한다는 것이 선결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 서부전선 일대(특히 판죽골을 비롯한 문산 부근 일대)와 동부전선의 편치볼(punch bowl)과 향로봉은 특히 잘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했기에 이 세 지역은 앞으로 자연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 할만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비무장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수목을 통해 우리 강토에 알맞은 수종을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는 학술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론에서 “편치볼, 향로봉 및 금강산 그리고 판문점 부근 일대는 남북한의 과학자(주로 생물학 및 지질학자)를 동원하여 공동으로 다시 한 번 천연자원에 관한 연구조사를 시켜 그 실태를 파악할 것을 희망한다”면서 공동조사가 여의치 않다면 남한 단독으로라도 이 연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글을 맺었다.

DMZ 생물상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 제안을 토대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은 1972년 가을 스미소니언연구소와 함께 DMZ 조사를 추진했던 한국자연보존연구회에 재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33명 학자는 1966년 조사했던 4개 지역을 다시 찾았고, 조사 결과는 1975년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종합학술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²⁶⁾ 연구팀은 서문에 “군사적 특수사정으로 일부 특정지역은 접근이

25) 강영선, 『비무장 지대의 천연자원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1972.

26) 한국자연보존연구회,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자연종합학술조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금지되어 세밀한 조사를 못했고 다만 개괄적 조사를 할 수 있었을 뿐, 다른 지역도 대체로 길을 따라 조사, 기록된 것으로 한계를 지닌다”고 밝혔다. 사실 이 조사를 비롯해서 그동안 진행된 대부분의 DMZ 생태조사는, 정확히는 DMZ 인접지역에 대한 조사이다. 엄청난 양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DMZ 내부는 현실적으로 연구자들의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경관 관찰과 조류 중심의 개략적 파악만 가능했다. 이러한 사정은 이후 이루어진 대부분의 DMZ 생태조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비무장지대와 인접지역 일대가 “통제된 가운데 자연의 섭리만이 지배하는 폐쇄구로 격리되어 별천지를 이루”어 왔으며, 설악산-향로봉-금강산을 묶어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강영선은 비무장지대 부근의 생물상에 관한 완전한 연구가 한국 전체 생물상 연구의 기본이 된다고 주장했다.²⁷⁾ 이 지역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희귀종들이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중앙부의 생물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주, 중국의 북방, 일본 생물상과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데 비무장지대 일대의 생물상 규명이 학술적으로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이었다. 즉, DMZ 생물상이 다양성 차원을 넘어 생물지리학이나 생물군집 연구에 유용하다는 주장이었다. 어류의 경우에도 “인공을 가하지 않고 어떤 지역을 자연상태로 방치했을 때 그곳의 생물군집, 특히 어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무 것도 알려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DMZ 인근의 학술적 가치는 각별했다.²⁸⁾ 물론 연구진들도 이 지역이 인간의 손길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곳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식물종간 상관계수가 매우 낮으며, 이는 매년 방화로 인하여 종간에 경쟁과 침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거나, “1968년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DMZ 부근의 시계청소를 위한 벌채 및 방화는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식물구계 구성에도 좋은 연구자료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언급은 DMZ가 일종의 생태시험장이나 야외실험실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DMZ의 가치가 생물다양성이나 야생동식물의 보고에서 점차 본격적

1975.

27) 강영선, 앞의 1972 책, 78~88면.

28) 강영선, 앞의 1972 책, 258면.

인 생태학적 연구 대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생태조사 결과가 1975년 종합 보고서로 나오기 이전에 개별적인 논문으로 발표되면서 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암산, 향로봉 등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1973년 7월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대암산·대우산(천연기념물 제 246호)과 향로봉·건봉산(천연기념물 247호)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두 번의 DMZ 생태조사가 거둔 직접적인 성과였다.

1972년 6월 『비무장지대의 천연자원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펴낸 강영선은 곧바로 국토통일원의 의뢰를 받아 남북한의 야생동물을 개관한 『남북한 천연자원의 비교연구』를 발표했다.²⁹⁾ 이 보고서는 선행 연구를 활용하여 남과 북에 서식하는 포유류, 조류, 파충·양서류, 담수어류를 목록화하고, 남과 북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산종을 제시했다. 당시 국토통일원은 7·4공동선언을 배경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여러 주제들의 보고서를 의뢰했고, 그 속에서 생물학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었다. ‘천연자원’이라는 표현은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 남북한 동식물이 정부의 관심사가 되었고, 이는 비무장지대 생태조사가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이었다.

이듬해인 1973년 강영선은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천연자원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를 소개하고 나아가 남북한 민통선 지역을 합친 광대한 지역을 남북한 공동으로 연구하는 가능성을 검토했다.³⁰⁾ 그는 향로봉 일대를 북한의 금강산과 남한의 설악산과 연계하여 남북한 총인원 50명 정도가 3년간 장기공동연구를 실시한 뒤 국립공원으로 공동개발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국립공원이자 국제관광지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공동조사를 위한 요청 사항으로 남북한 학자들의 신변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연구를 위한 행동에 절대적인 자유를 주고, 연구대상지역에 묻혀있는 지뢰 등 위험물을 전부 제거해 연구자들의 안전을 도모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지뢰 제거 등은 결코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였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강영선은 1973년 하반기에 앞의 구상을 더욱 진전시켜 『비무장지대 공동개발을 통한 남북한 상호협조하의 문제점 및 대책』을 작성했다.³¹⁾ 이는 설악산-향로봉-금강산을 잇는 태백산맥의 중심부를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국립공원으로 개발하여 세

29) 강영선, 『남북한 천연자원의 비교연구』, 국토통일원, 1972.

30) 강영선, 『비무장지대의 천연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국토통일원, 1973.

31) 강영선, 『비무장지대 공동개발을 통한 남북한 상호협조상의 문제점 및 대책』, 국토통일원, 1973.

계적인 자연공원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3년간에 걸친 종합학술조사의 기본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각각 84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며, 동물부, 식물부, 생태부, 지질부, 조경부 등 5개부, 23개의 반을 구성하고 양측의 단장과 각 부장으로 합동협의회를 만들어 중요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조사결과는 협의회에서 수시로 검토하며, 1년마다 중간보고를 인쇄하여 공동으로 출판하여 양측 정부에 제출하며, 3년 경과 후 최종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8,417여만원으로 제안되었는데, 강영선은 “동양에서 제일가는 자연공원이 만들어 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이 예산의 몇 10배 내지 몇 100배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보고서는 비무장지대 남북 공동 생태조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담은 첫 제안이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1973년 3월 북한의 매복기습공격으로 군사분계선 표식물 유지작업을 하던 한국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그해 8월 북한이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남북한 관계는 다시 냉각되었다.³²⁾ 이에 따라 공동조사 제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비무장지대를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자는 제안이 수차례 제기되었지만 4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970년대까지 이루어진 비무장지대 생태조사는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자연보존연구회 구성원들이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천연보호구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물학자들의 주장을, 천연기념물을 관장하는 문화공보부가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한 후속연구의 필요성도 수용되었기 때문에 생물학자들의 DMZ 생태조사연구는 그들이 의도했던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결과물도 단순한 목록에서 생태변화 등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DMZ 조사가 생물학자들의 연구역량 제고의 토양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제 비무장지대는 더 이상 비생산적인 폭력의 공간이나 불모의 땅이 아닌 학술적 탐사의 장이 되었다.

32) 제성호,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DMZ를 평화지대로』, 서울프레스, 1997, 70면.

V. DMZ 환경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제안들: 농담에서 세계유산까지

1960년대 중반까지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이 제시된 바 없었다. 스미 소니언연구소와 협력으로 진행한 1968년 DMZ 생태조사 보고서에서 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전환시키자는 구상이 처음 제시되었고, 이 조사에 참여했던 강영선도 1972년 국립공원화를 재차 제기한 바 있다. 1970년 8월 열린 통일문제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의 페이지(Glenn D. Paige) 교수는 비무장지대를 ‘평화통일공원’으로 만들어 65세 이상의 노인과 6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개방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DMZ에 공원과 복지시설을 건립하자는 이 제안은 “딱딱한 장대를 웃겨버린” 농담으로 취급되었다.³³⁾

1971년 군사정전위에서 로저스(Feliz H. Rogers) 유엔군 수석대표가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북한에 공식 제안했지만 북한 대표단이 “유엔군 측이 비무장지대를 요새로 만들었으므로 먼저 철거하라”고 반발해 이 제안은 무위로 끝났다.³⁴⁾ 이듬해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평화통일을 위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했으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공식 발표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구상이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1971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이 무력행사 포기를 실증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남북한 공동철도구축 노력 제안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무장간첩납파 중지, 무력적화통일 야욕 즉각 포기 등을 통일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제시하면서 단순한 정치적 공세에 머무르고 말았다.³⁵⁾

1972년 8월 통일문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정책개발원 이영호 원장이 국제평화지대 안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더욱 구체화되어 국토통일원 통일정책자료로 발표되었는데,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사실상 최초의 체계적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³⁶⁾ 일차적으로 명실상부한 비군사화지역을 만들고, 남북한의 군대를 대신해

33) 「통한 가능성 예시」, 『매일경제』 1970.8.31; 「통일공원」, 『경향신문』 1970.8.31.

34) 「통일한국에의 새 포석, 비무장지대 평화이용 제의 원근」, 『동아일보』 1971.6.14.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제성호, 앞의 1997 책, 89면 참고.

35) 「적화야욕 포기가 평화통일 제일보」, 『경향신문』 1972.2.12. 김용식 장관의 제안은 김일성이 1972년 1월 일본 요미우리신문사와의 회견에서 밝힌 남북통일 주장에 대한 대응이었다.

36) 이영호, 『자주, 평화, 민족단결 삼개 통일원칙의 이념적 정립문제와 구체화 방안』, 국토통일원, 1972, 18~40면.

국제평화군이 비무장지대를 지키며, 민족문화유산연구소, 국제아동 미술제 · 음악제 · 과학제 · 체육제를 위한 시설, 자연생태연구소, 농림업연구소, 어업연구소, 국제평화연구소, 유엔대학 등을 세우자는 구상이었다. 다음 단계로 비무장지대에 통일촌을 만들어 통일한국을 실험하자는 제안이 뒤따랐다. 아울러 비무장지대의 관광화도 추진하여 국제적인 관광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사와 시설을 포함시킨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열의를 불러일으킨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인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이 방안도 남북한 군대의 철수 등 군사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세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1973년 강영선의 DMZ 공동조사 제안과 때를 같이 하여 비무장지대를 남북이 공동개발하는 방안에 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³⁷⁾ 이 보고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개발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 교류지대, 융합지대로 단계적으로 변형시키자는 구상이었다. 또한 이를 위해 남북이 공동학술조사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남북학자들이 공동으로 실시하되, 국제적으로 많은 학자를 참여시켜 국제적 규모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1974년 북한이 판 침투용 땅굴이 발견되고,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등으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비무장지대도 더 이상 논의대상이 되지 못했다.

1982년 한국 정부는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 성명을 통해 자유관광 공동지역, 공동경계장 등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안했고, 여기에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공동학술조사 제안이 포함되었지만 역시 제안에 머물렀다.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던 1986년 10월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을 발표하면서 200억톤의 물폭탄 공격 가능성을 제시했고,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속하게 ‘평화의 댐’ 건설이 결정되었다. 범국민적 성금모금이 시작되었고, 이듬해 2월 평화의 댐 기공식이 열렸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평화의 댐은 얼마 지나지 않아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작된 정보를 토대로 건설한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³⁸⁾ 평화라는 역설적 이름이 보여주듯 아직은 냉전의 시간에 머물러있었고, DMZ 인근은 여전히 냉전

37) 김정후, 『비무장지대의 공동개발방안』, 국토통일원, 1973.

38) 김종육, 「냉전의 ‘이종적 연결망’으로서 ‘평화의 댐’ 사건: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한 경험적 추적」, 『동향과 전망』 83,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11, 79~112면.

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이 재확인되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대형 댐 건설에는 생태조사를 비롯한 사전영향평가가 필요했지만 평화의 댐은 그러한 과정을 밟지 않았고, 이 댐을 둘러싼 논란은 민통선을 비롯한 DMZ 지역에 대한 관심과 생태조사의 필요성을 높였다. 이를 배경으로 내무부의 후원을 받아 강원도와 경기도가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종합적인 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조사 후 바로 발표된 보고서는 “평화의 댐이 완공되면 많은 국민들이 이 역사의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견되어 민북지역 전역이 국민적 관심과 관광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한껏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³⁹⁾ 실제 이 보고서는 단순히 이 지역의 자연생태 환경을 부각시키면서 보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보존과의 조화 속에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적절한 개발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즉,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희귀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을 살리는 동시에 열전과 냉전의 흔적을 활용한 안보관광지로서 잠재력을 살리자는 것이었다. 보고서에 실린 일부 논문은 “개발을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민통선에 속하면 오랫동안 인적이 끊겼으므로 대단히 잘 보호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군의 계속된 작전 관계로 많은 부분이 잘리고 깎일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철원지역은 민간인이 많이 출입하고 들어가서 사는 관계로 예상했던 것만치의 생태계 변화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고 기술했다.⁴⁰⁾ 이전에 이루어진 비무장지대 인접지대 생태조사와는 달리 더 넓은 민통선 지역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결과도 이전 보고서와는 다소 결이 달랐다.

1985년 강원일보사가 강원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창사 40주년기념으로 휴전선일대 학술조사단을 구성하여 강원지역 비무장지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⁴¹⁾ 등 재개된 DMZ 생태조사를 배경으로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공약 중 하나로 통일안보관광권 개발에서 안보관광을 제시했고, 그 결과 관광지로서 DMZ가 부각되었다. 더 나아가 이듬해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이 설치된 평화시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1989년 정부는

39)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민통선북방지역자원조사보고서(강원도)』, 강원도, 1987, 78면, 342~343면.

40)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앞의 1987 책, 382면.

41) 조사결과물은 조규성 외, 『휴전선 일대의 자연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1987로 간행되었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DMZ내 적정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점차 평화통일시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즈음 과학기술처도 비무장지대 생태계 공동조사 등 남북한 과학기술교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은 천연기념물을 담당하는 문화재관리국의 영역을 넘어 정부 전반에서 DMZ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반도 DMZ는 국제기구의 관심 목록에도 오르게 되었다. 1989년 5월 제15차 유엔환경기구(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의 환경청장이 UNEP 주관으로 비무장지대 생태계 공동조사를 제의했다. 한국 정부관계자의 제안이었지만 UNEP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하자는 구상이었고, 이후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국제자연보전연맹, 유네스코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DMZ 생태조사와 환경보전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물론 국제기구를 통한 DMZ에 대한 조사 및 보전 제안들도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다.

1990년대 들어 남북간의 만남이 재개되면서 DMZ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지만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1990년 9월부터 남북한 고위급회담이 시작되어 이듬해 12월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고, 1992년 9월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이 발휘되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과학, 기술, 환경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명시하면서 공동조사 등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이듬해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면서 합의서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정부가 준비하던 DMZ 생태조사를 비롯한 과학기술교류사업도 모두 중단되었다. 그 이후에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한 공동생태조사는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었지만 2019년 현재까지 실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972년 처음 제기된 공동조사라는 구상은 반세기가 묵은 낡은 제안이 되었다.

부침은 있었지만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시작되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자체마다 DMZ 및 인근지역에 대해 다양한 기획안을 마련했다. 1990년대 중반이 되면 해외의 개인이나 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DMZ 보전 및 활용에 대한 여러 구상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66년 DMZ 생태조사 프로젝트에서 스미소니언연구소의 컨설턴트로 참여했던 김계중은 1993년 한국 정부에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국제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고, 이 지역을 ‘평화 생태계 보호지’로

지정하지는 ‘The Korean Peace Bioreserve System(KPBRs)’ 구상을 밝혔다. 이 제안에 대해 정부는 그 취지와 목적 등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한 합의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⁴²⁾ 같은 해 ‘비무장지대 평화공원건설 해외동포연합’은 한국 정부에 3만명의 서명을 받아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정책방향과는 부합하지만 북한의 협조가 없이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답했다.⁴³⁾ 또한 1994년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Experimental Cities, Inc.’가 비무장지대에 실험적 도시이자 자족적인 공동체로서 ‘Earthlab’이란 연구소를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주미 한국대사관에 보내왔다. 역시 한국 정부는 재원조달계획 등이 없어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한과의 합의가 없이는 어떠한 시설물 설치나 개발이 가능하지 않음을 밝혔다.⁴⁴⁾

이처럼 DMZ를 둘러싸고 다양한 구상들이 등장하는 속에서 생태환경에 대한 조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1995년 산림청 산하 임업연구원은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부 주관 하에 국립환경연구원과 학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의 산림생태계조사를 기획했다. 북한과의 공동조사를 제의해 동의할 경우 비무장지대 전체를 정밀조사하겠다는 구상 하에 국방부에 승인 요청까지 했다. 하지만 북한은 동의하지 않았고, 국방부도 불가 통보를 내렸다. 이에 따라 남측 지역만 조사하게 되었고, 동해안 지역부터 서해안 도서지역까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1년에 1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펴냈고, 2000년 이를 종합하는 보고서를 출판했다.⁴⁵⁾ 이는 정부 산하기관이 주도하여 사계 전문가를 모아 직접 조사를 수행했고, 그동안 이루어진 조사에 비해 장기간 동안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양상이었다. 특히 이 보고서는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임목축적량이 남한 평균의 48%에 불과해 상당 지역이 당장 복원이 필요한 상태라 밝혔다. 그간 많은 DMZ조사

42)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1993(국가기록원 BA0715449). 김계중은 1997년 국제 NGO인 The DMZ Forum을 조직하여 한국 DMZ에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설치하여 동북아시아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DMZ 포럼 홈페이지(<http://www.dnzforum.org/>, 2019년 2월 접속).

43) 통일부 정책홍보실 정책기획팀,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사업철(2-1)(001)」, 1993(국가기록원 CA0196299).

44) 통일부 통일정책실, 「비무장지대 『EARTHLAB』 설치에 대한 검토보고」, 1994(국가기록원 CA0196299).

45) 산림청,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산림생태계 조사 종합보고서 1995~2000』, 산림청, 2000.

가 ‘신종 등 희귀 동식물 찾기’에 주목하여 ‘인간이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임을 강조하다보니 그 실태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DMZ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가 더욱 사실적이고 정교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비무장지대는 그것이 지니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정부가 특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지만 1997년 8월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은 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하고, 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평화적 이용사업과 통일부 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실시하는 통일정책 관련 사업은 예외로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전국토에 걸쳐 지형·환경지질 및 야생동식물 등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비무장지대도 그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비록 DMZ 자체의 물리적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비무장지대에 대한 생태조사는 더 이상 이례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정부가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국토관리 정책의 일부가 되었다.

DMZ 내부는 반세기 이상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된 금단의 공간이었지만 2009년 처음으로 국내 연구팀의 진입이 승인되었다. 환경부는 2008년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중부지역 생태계 조사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국방부에 중부지역 생태계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다. 5월 국방부는 이 조사계획을 승인했고, 9월 유엔사와 국방부는 민간인 조사단의 DMZ 출입을 허가했다. 이는 DMZ에 대한 첫 번째 조사허가였다.⁴⁶⁾ DMZ에 대한 생태조사는 국방부는 물론 UN군사령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군사적 대치상황과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따라 갑자기 변화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전까지 진행된 DMZ 생태조사는 민통선지역 등 인접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철책 너머로 DMZ를 조망하는 수준이었고, 내부 출입은 판문점과 경의선 및 동해북부선 연결 지점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진행되었다. 비록 중부지역만이었지만 DMZ 내부 전역에 대한 종합 생태조사는 이때가 처음이었고, 이는 가장 높은 긴장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방부도 DMZ를

46) 국립환경과학원, 『DMZ 중부지역 생태계 조사 보고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0. 1970년대 중반 국제두루미재단 공동 설립자인 조류학자 George W. Archibald가 두루미와 따오기 연구를 위해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를 얻어 대성동과 공동경비구역 등 비무장지대에 진입한 적이 있었지만 한국 연구진에게는 문호가 열리지 않았다.

이전과는 다르게 보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일상적인 업무가 된 DMZ 생태조사를 근거로 DMZ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영구보전계획이 만들어졌고, 그 일환으로 국제기구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1999년부터 DMZ를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Biosphere Programme)에 따른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었고, 2001년에는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구상은 기본적으로 DMZ 자연생태계 보전을 전면으로 내세운 구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나누어 지정 목적에 맞도록 국내법에 따라 보전관리를 하게 된다.⁴⁷⁾ 또한 환경부는 접경생물권보전지역(Transboundary Biosphere Reserve)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2개국 이상의 국경지역에 설립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2004년에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World Heritage)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유산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과 함께 두 가지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복합유산이 있는데, 비무장지대는 복합유산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함께 문화유산까지 포함한 협력 방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비무장지대의 생태환경을 지키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구상들은 아직까지 핵심 당사자인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지는 못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DMZ의 동식물과 물리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남북이 생태공원이나 생물권보전지역을 세우는 데 합의를 한다면 단순히 자연환경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를 이끄는 촉진제가 될 것이며, 그 가능성은 접경지역에 설치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러 평화공원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⁴⁸⁾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는 생태평화공원 외에도 UN대학이나 환경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고아원 등 인도적 기능의 기관을 세우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었다. 더 나아가 여러 기관을 집적시킨 평화시를 건설하자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에 깔린 수많은 지뢰를 제거

47) 한반도에서는 1982년 설악산이 처음으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백두산(1989), 제주도(2002), 황해남도 구월산(2004)에 이어 2009년 신안 다도해와 북한 묘향산이 지정되었고, 2018년 순천시와 북한 금강산이 동시에 지정되었다.

48) Saleem H. Ali ed., *Peace Parks: Conserv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The MIT Press, 2007.

해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차치하더라도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설을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에 세운다는 계획은 막대한 자원뿐 아니라 “「인질」로서의 가치가 많은 시설이나 인원을 놓자”⁴⁹⁾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현이 어렵다. 때문에 DMZ의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여겨진다.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구상이 나오게 된 것은 고립된 지역에서 서식하면서 독특한 생태계를 구축해온 동식물이 있었기 때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DMZ 환경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이 대부분 남북 공동생태조사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것이다.

Ⅶ. DMZ를 바라보는 북한의 시선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DMZ는 한반도를 가르는 특수한 공간으로 이미 고유명사화 되어있으며, 그것이 지니는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2004년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생태축’이라는 개념이 법에 포함되었는데, 3대 핵심 생태축으로 백두대간, DMZ, 도서지역이 설정되었다. 2017년 발행된 한국의 환경에 대한 OECD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생물다양성을 설명하면서 남북한 사이의 DMZ는 인간 활동이 닿지 않는 독특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2%의 멸종 위기종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한국 생태계의 중요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⁵⁰⁾ 이처럼 현재 남한에서는 DMZ를 한반도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북쪽에서 DMZ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다르다. 북한은 비무장지대를 철저히 “교전 쌍방이 협정에 의하여 무력을 배치하지 않는, 일종의 완충지대”라는 사전적 정의이자 일반명사로만 이해한다. 종다양성이나 생태환경, 자연보호지역을 다루는 북한의 문헌에는 DMZ에 대한 서술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⁵¹⁾ 북한에게

49) 김정후, 앞의 1973 책, 36면.

50) OEC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Korea 2017*, 2017, pp.80~81.

51) 예를 들어 북한의 생태환경을 다루고 있는 DPR Korea SoE Project Team, *DPR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03; Ministry of Land and

비무장지대란 군사적 충돌의 결과물이자 더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완충지대일 뿐이기에 민족분열의 상징이자 속히 제거해야할 대결시대의 유산에 불과하다. 그 결과 DMZ를 보전하자는 구상은 민족의 분단을 영구히 하려는 범죄적 기도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는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해 “민족분열의 불행과 고통의 상징이며 북과 남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그 무슨 ‘유산’으로 등록하려는 것은 상식이하의 반민족적 망동이다”이라고 비판했다.⁵²⁾ 비무장지대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고 국제관광지로 개방하려는 시도는 “민족분열을 영구화하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망동”이라면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는 보존대상이 아니라 우리민족이 자유롭게 북과 남으로 오고갈 수 있게 하루빨리 그 존재자체를 없애야 할 대상이다”고 주장했다.⁵³⁾ 2011년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을 국제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도 언제 터질지 모를 가장 첨예한 화약고에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위험한 장난이라고 비판하면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도 그 무슨 ‘안보관광지’요, ‘생태평화공원’이요 하면서 반공화국 대결모락소동과 돈벌이에 리용”한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⁵⁴⁾

물론 그간 북한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구상을 밝힌 바 있다. 1987년 김일성의 성명을 통해 남북한이 단계적으로 무력을 감축하여 병력을 10만명 이하로 줄이자는 제안을 했으며,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복도’로 전환시키자고 발표했다.⁵⁵⁾ 이후 이러한 제안은 1990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으로 이어졌고, 여기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민간인에게 개방하여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방안이 담겨 있었다.⁵⁶⁾ 하지만 이는 주한미군 철수 등에 방점이 찍힌 정치적 구상이었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되지

Environment Protection,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2012에는 DMZ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지 않다.

5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담화」, 『로동신문』 2004.10.5.

53) 「영구분열을 피하는 비무장지대보존책동」, 『로동신문』 2004.10.8.

5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로동신문』 2011.7.1.

55) 황진식, 「우리의 군축제안과 올림픽」, 『로동신문』 1987.8.9.

56) 제성호, 앞의 1997 책, 92~93면.

못했다.

북한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다른 분계선이 지나는 서해상의 평화유지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1953년 정전협정에서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는 유엔군 사령관의 통제에 두도록 합의했고, 유엔군은 함정 및 항공기 초계 활동의 북방한계를 정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했다. NLL은 사실상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 양측이 합의했고, 이는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성과였다. 물론 생태계 및 자원보호를 간과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 방안은 첨예한 서해의 분쟁 문제를 푸는 실마리라는 기대를 모았다.⁵⁷⁾ 하지만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합의는 진척을 보지 못했고,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겪으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무산되고 말았다.⁵⁸⁾

2014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를 통해 “비무장지대에 ‘세계 평화공원’을 건설하는 것보다 서해 5개 섬 열점지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것이 더 절실한 문제 아닌가?”라고 물었다.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안보다 2007년 합의한 남북정상선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설정 등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⁵⁹⁾ 이듬해에도 “최악의 대결상황이 지속되고 언제 전쟁의 불씨가 튀길지 모를 세계최대의 첨예한 열점지대에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과연 제정신이 있는 소리인가?”라며 비판했다.⁶⁰⁾

2018년 4월의 남북정상회담이후 기존의 날선 비난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비무장지대 문제는 서해의 분쟁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을 통해 “첨예한 열점지역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며, 전쟁의 불만이 없는 평화번영의

57) 남정호, 「군사·경제의 평화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의 평화도 보장되어야 한다」, 『민족화해』 29,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07, 22~25면.

58)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이후의 전개에 대해서는, 이한주,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통일법연구』 3,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201~223면 참고.

59)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 『민주조선』 2014.4.24.

60) 「전국연합근로단체 대변인 답화」, 『로동신문』 2015.8.20.

새시대를 열어나가자”고 주장했다.⁶¹⁾ 서해연안 접경지역은 군사적 이유 때문에 남북한 모두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DMZ와 유사하게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잘 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DMZ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의 환경·생태계 보호와 지역발전에는 남북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양평화공원’ 지정을 위한 남북협력이 추진된 바 있다.⁶²⁾ 결국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가 군사적 완충지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해상의 군사적 대치 공간인 서해를 평화해역으로 만드는 문제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비록 비무장지대와 생태 문제를 연결 짓지는 않고 있지만 북한도 자연환경이나 생태보전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2년 리우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여 1994년 정식 체약국이 되었으며, 1998년 세계환경기금(GEF) 협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생물다양성 전략 및 행동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3년에는 국제자연보존연맹의 6개 분류 기준에 따라 보호구를 지정했으며, 2005년의 자료에 의하면 총 234개의 자연보호구가 존재한다.⁶³⁾ 또한 2018년에는 랍사르협약에도 가입했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고, 국제기구 또한 소통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통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DMZ에 대한 공동프로젝트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⁶⁴⁾

이러한 점에서 두루미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안변프로젝트’는 남북의 생태 협력에 매우 흥미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⁶⁵⁾ 또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추진된 생물과 관련된 남북한 공동사업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솔잎혹파리방제사업, 연어부

61)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결의문」, 『로동신문』 2018.6.16.

62) 남정호·장원근·최지연·육근형·최희정·이원갑,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4~5면. 이 연구는 남북한 현안인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사항은 다루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동어로·평화수역과 남북한 해상경계설정 현안을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 나라의 자연보호지역』, 2005.

64) Rakhyun E. Kim,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MZ Forum, 2015.

65) ‘안변 프로젝트’는 2008년 국제두루미재단의 주도로 시작된 북한의 두루미 월동지 복원사업으로, 한국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김신환 외, 『두루미, 하늘 길을 두루두루』, 들녘, 2015, 74~91면.

화장 건립사업 등 상대적으로 소규모, 분권화된 방식으로 추진되었지만 북한이 거둘 수 있는 가시적 효과가 분명한 사업들은 적은 비용으로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고 있다.⁶⁶⁾ 이러한 사실은 서해안의 무인도에서 번식하는 저어새나 한반도 중부지역에서 월동하는 두루미의 생태에 대한 연구, 또는 최근 제기된 DMZ의 다양한 식물의 꽃가루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북한이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해한다면 남북한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보여준다.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생물을 매개로 한 소규모 사업 중심의 점진적·지속적 접근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DMZ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볼 때 남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무장지대 보전에 대해 논박할 때마다 제기하는 NLL 문제를 비롯해 서해평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남한은 비무장지대를 생태계의 보고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비무장지대를 군사분계선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된 서해평화협력지대 등 서해 군사분계선 및 해역의 평화적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북한에게 생태적 가치를 포함해서 DMZ가 갖고 있는 다양한 효용을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이미 갖고 있는 자연보호구와 비무장지대를 연결시키고, 남쪽의 생태보호구와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VII. 맺음말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긴장된 공간이었던 비무장지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귀 야생동물이 뛰노는 생태적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 과정은 사람이 아닌 동물과 식물이라는 자연의 힘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 변화는 생물학자들의 눈과 손을 거쳐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적 관점에서 주목받는 대상으로 만든 것은 학자들 이전에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동식물들이었다. 이는 남북을 잇고 DMZ를 ‘평화와 희망의 녹색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가 바로 동식물임을

66) 정규서·최성철·김재한·강택구, 『DMZⅢ-접경지역의 화해·협력』, 소화, 2002, 221면.

말해준다. 최근 남북관계의 극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후의 전개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DMZ 공동조사라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제안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 급진전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공동조사는 물론 공동관리와 활용까지 속전속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제기된 구상들이 아직도 결실을 맺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작은 아이티이라도 하나씩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달은 남북을 오고갈 수 있는 유일한 포유류로 꼽힌다. 지리산에서 포획된 수달이 2006년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의 흐르지 않는 강에 방사되었다. 한강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 수달은 자신의 위치 신호를 보내는 전자 칩을 이식받았다. 하천은 DMZ로 단절되었지만 수달은 물속을 통해 남북을 왕래할 것이다. 비록 이 수달이 보낸 신호는 오래지 않아 사라지고 말았지만 2008년 열린 제10차 국제수달총회에서 한강이는 ‘평화대사’(Peace Ambassador of Korea)로 임명되었다.⁶⁷⁾ 이처럼 수달을 매개로 한 남북협력도 유력한 대상이 된다. 실제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남북은 수달의 생태에 대해 공동연구까지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수달은 여전히 남북한을 이어줄 유력한 후보 중의 하나이다.

북한은 DMZ의 생태적 가치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생태조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북한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비무장지대 전체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군사분계선이 말뚝 표지물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들은 남북을 오고갈 수 있다. 이는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분계선 남북의 생태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때문에 군사분계선 남쪽의 조사만 충실하게 수행되어도 그 결과를 북쪽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일상적 국토관리의 일부가 된 DMZ 생태조사가 지닌 또 다른 가치이다.

비무장지대에 평화가 찾아오고 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DMZ의 산양은 지금과 같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DMZ는 모순과 역설의 공간이지만 반세기 넘게 그 공간을 지켜오면서 생태적 가치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 생물들을 매개로 역설과 모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투고일: 2019.04.10

심사일: 2019.05.24

게재확정일: 2019.06.07

67) 함광복,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65~68면.

참고문헌

- 강영선, 『남북한 천연자원의 비교연구』, 국토통일원, 1972
- _____, 『비무장 지대의 천연자원에 관한 연구』, 국토통일원, 1972
- _____, 『비무장지대 공동개발을 통한 남북한 상호협조상의 문제점 및 대책』, 국토통일원, 1973
- _____, 『비무장지대의 천연자원에 관한 공동연구』, 국토통일원, 1973
- 국립환경과학원, 『DMZ 중부지역 생태계 조사 보고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0
- 김신환 외, 『두루미, 하늘 길을 두루두루』, 들녘, 2015
- 김정후, 『비무장지대의 공동개발방안』, 국토통일원, 1973
- 김준호, 『한국 생태학 100년』, 서울대출판부, 2004
- 남정호·장원근·최지연·육근형·최희정·이원갑, 『서해연안 해양평화공원 지정 및 관리방안 연구(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5
- 산림청,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산림생태계 조사 종합보고서 1995~2000』, 산림청, 2000
- 엔도 키미오 저, 정유진·이은옥 공역, 『아리랑의 파랑새: 조류학자 원홍구·원병오 부자 이야기』, 컵앤캡, 2017
- 이병훈, 『유전자 전쟁의 현대사 산책』, 사이언스북스, 2015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민통선북방지역자원조사보고서(강원도)』, 강원도, 1987
- 정규서·최성철·김재한·강택구, 『DMZⅢ-접경지역의 화해·협력』, 소화, 2002
- 제성호,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DMZ를 평화지대로』, 서울프레스, 1997
- 조규성 외, 『휴전선 일대의 자연연구』, 강원대학교출판부, 198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 나라의 자연보호지역』, 2005
- 코리아DMZ협의회, 『DMZ 총람』, 늘품플러스, 2011
- 하국 강영선박사 정년퇴임기념사업회 편, 『하국 강영선박사 정년퇴임기념문집』, 1982
- 한국자연보존연구회,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자연종합학술조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5
- 한국자연보존협회, 『비무장지대인접지역 자연종합학술조사보고서』, 문화부 문화재관리국, 1992
- 함광복,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 김재한, 「DMZ 연구의 오해와 논제」, 『통일문제연구』 23-2, 평화문제연구소, 2011
- 김종옥, 「냉전의 ‘이종적 연결망’으로서 ‘평화의 댐’ 사건: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한 경험적 추적」, 『동향과 전망』 83,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11
- 남정호, 「군사·경제의 평화뿐만 아니라 생태환경의 평화도 보장되어야 한다」, 『민족화해』 29,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07

- 박은지 · 여인애, 「한반도 비무장지대 일원 정책과 연구의 변화 및 시사점」, 『환경정책』 26-2, 한국환경정책학회, 2018
- 신향숙 · 문만용, 「강영선의 한국생물학 만들기」, 『제7회 한일과학사 세미나 발표집』, 한국과학사학회, 2017
- 이한주, 「2007년 10 · 4 남북공동선언」, 『통일법연구』 3,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 최기철 · 전상인, 「영동지방에 서식하는 담수어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동물학회지』 11-1, 한국동물학회, 1968
- Hyun, Jaehwan, “Making Postcolonial Connections: The Role of a Japanese Research Network in the Emergence of Human Genetics in South Korea, 1941~1968”, 『한국과학사학회지』 39-2, 한국과학사학회, 2017
- Kim, Bong Kyun and Yong Ahn Park, 「The Origin of the so-called Punch Bowl」, 『지질학회지』 3-1, 대한지질학회, 1967
- Ali, Saleem H. ed., *Peace Parks: Conserv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The MIT Press, 2007
- Buechner, Helmut K., Edwin L. Tyson and Ke Chung Kim, *Final Report: A Cooperative Program for Ecosystem Research in Korea, October 1966~September 1968*, Office of Ecology, Smithsonian Institution, 1968
- DPR Korea SoE Project Team, *DPR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03
- Kim, Rakhyun 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DMZ Forum, 2015
- Ministry of Land and Environment Protection,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2012
- OEC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Korea 2017*, OECD, 2017
- Brady, Lisa M., “Korea's Green Ribbon of Hope: History, Ecology, and Activism in the DMZ”, *The Solutions Journal* 3-1, 2012
- Brady, Lisa M., “Life in the DMZ: Turning a Diplomatic Failure into an Environmental Success”, *Diplomatic History* 32-4, 2008
- Kang, Y. S. and K. W. Moon. “Drosophilid Fauna in the Vicinity of the Demilitarized Zone in Korea”, *Drosophila Information Service* 43, 1968
- Thomas, Julia Adeney, “The Exquisite Corpses of Nature and History: The Case of the Korean DMZ”, *The Asia-Pacific Journal* 7-3, 2009

The Meaning and Prospect of the Ecological Survey of the DMZ

Moon, Man-yong

The Korean DMZ, a relic of the Cold War, began to be newly recognized as a repository for wildlife based on the first ecological survey that was conducted in the mid-1960s. Emphasizing ecological values, South Korean biologists proposed the joint implementation of the DMZ survey between the two Koreas and various ideas have been presented to preserve or peacefully utilize the DMZ. In the process, the DMZ ecological survey has transformed itself from a special event to a routine land management. However, North Korea views the DMZ as a symbol of inter-Korean division and as a legacy that should be removed quickly. Therefore, in order to bring about inter-Korean cooperation, we need to make North Korea aware of the various values of the DMZ and try to resolve the issue of the maritime peace zone in the West Sea together. Considering the numerous land mines already laid out along the DMZ, conservation of the DMZ as an ecological space would be the most realistic and peaceful way of utilizing the area. We should build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by steadily carrying out joint projects with animals and plants.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it is the DMZ's wildlife that has made the DMZ a target of attention from an ecological and peaceful point of view.

Key Words : DMZ(Demilitarized Zone), ecological survey, a repository for wildlife, peaceful utilizing, conservation of environment